## 남해안 해수면 상승…갯벌이 줄어간다

수온 상승·극지방 빙하 해빙…28년간 매년 2.48mm씩 올라 거문도 4.43mm·완도 1.84mm ↑…항만 높이·해일 대책 시급

여수, 완도지역 등 남해안 해수면이 가 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해수면 관측을 시작한 지난 1989년 이래 1년 마다 평균 2.48mm씩 육지가 물에 잠기 고 있다. 또 남해안은 동·서해안에 비해 최 근 10년간 수온이 가장 높아진 것으로 나 타났다. 전문가들은 해수면 상승을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보고 남해안 갯벌 면적 축 소, 해일 피해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다.

2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지난 28년간(1989~2016) 남해안은 매년 평균 2.48㎜씩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으며, 매년 0.13㎜씩 상승폭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목포, 흑산도, 완도, 여수 등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18개조위관측소에서 측정한 자료다.

완도 인근 바다는 매년 1.84mm씩, 여수 바다는 매년 1.06mm 상승하고 있다. 여수 와 제주도 중간 지점에 자리한 거문도 인 근 바다는 매년 평균 4.43mm 상승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남해안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지난 28년간 해수면 높이의 평균 상승률은 매년 2.96mm으로, 매년 0.1mm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속화되고 있다.

해수면 평균 상승률은 제주 부근이 매년 4.55mm로 가장 높았으며 동해안 3.78 mm, 남해안 2.48mm, 서해안 1.47mm 순이다. 상승 가속화 정도 역시 동해·남해·서해안 순이었으며 각각 0.17mm, 0.13mm, 0.11mm 씩 매년 더해지고 있다. 제주 부근에서는

상승 속도가 -0.1mm씩 점차 느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28년간 해수면 높이의 평균 상승률은 IPCC(UN 기후변화대응협의 체)가 지난 2013년 발표한 전 세계 평균값 (2.0mm)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남해안의 평균 해수면 높이는 지난해 말 기준 167.5cm으로, 최근 10년(2007 ~ 2016)간 평균 높이(165.3cm)보다 2.2cm 높 았다. 서해안은 394.6cm(10년간 평균 393. 8cm), 동해안은 39.4cm(37.0cm)이다.

전문가들은 해수면 상승이 산업화와 깊 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해 수온 이 상승, 바닷물 부피가 늘었다는 설명이 다. 특히 갯벌 감소와 태풍·해일 등에 의한 피해가 심할 것으로 보여 항만 등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지난해 말 한반도 연안의 평균 수 온은 23.52도로, 남해안 24.33도, 서해안

23.78도 순이었다. 최근 10년(2007 ~ 2016)간 평균보다 각각 0.79도, 0.27도, 0.61도 높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반도 연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409.9ppm으로 최근 10년간 매년 평균 2.3ppm씩 증가하고 있

해수부 '2016 해양수산통계'에 따르면 전국 갯벌의 약 60%를 차지하는 전남 갯 벌 면적은 1987년 1179.1㎢에서 2013년 1044.4㎢으로 11.4% 감소했다.

이은일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 연구실장은 "해수면 상승 원인은 수온 상 승에 따른 부피 증가가 가장 크고, 극지 방·고지대 빙하가 녹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항만 높이를 조정해야 하며 해일이 닥쳤을 때 피해가 더 커지는 만큼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교통법규 자주 어기면 철창행 대형차 우선…7월 전체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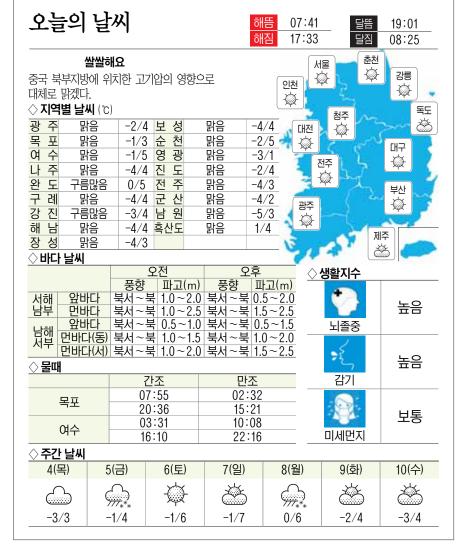
올해부터 교통법규 위반으로 1년간 10 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행위자 들은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게 된다.

경찰청은 2일 "속도·신호위반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제도를 올해부 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t 이상 대형 화물차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4월부터는 사업용 자동차, 7월부터는 전체 자동차까지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적용 대상이다. 대상으로 지정되면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되며, 과태료와 범칙금을 완납하고 이후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 해제된다.

경찰은 특별관리 대상자 지정 이후에 도 3차례 이상 위반하면 30일 미만 유치장 구류처분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에 넘기게 되고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 장을 신청한다. /박진표기자 lucky@



## 편리함 보다 자연보호

북구, 운암어린이공원 훼손 방지 45억 들여 지하주차장 건립



지하주차장이 조성된 운암어린이공원 전경.

〈북구청 제공〉

광주시 북구가 도심 공원 지하에 주차 공간을 마련했다.

공원 원형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수십억 예산을 들여가며 지하에 주차공간을 마련 한 것은 광주에서는 매우 드문 사례다.

그동안 운암어린이공원 주변 일대는 심각한 주차난 지역으로 꼽혔다. 운암시 장과 주변 상가의 이용객 감소 등으로 도심공동화도 심화되는 등 주민들로부 터 공영주차장 확충 요구가 꾸준히 제기 돼왔던 지역이다.

북구는 지난 2015년부터 예산 45억원 (국비 15억원·시비 7억5000만원·구비 22억5000만원 )을 들여 운암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을 추진했다. 하지만 평(3.3 ㎡)당 1000만원 달하는 높은 부지 매입 비용으로 난항을 겪었다.

같은해 10월 열린 민·관간담회에서 지역 주민들은 공원 부지 지하에 주차장 을 조성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공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예산이 더 들더라도 지 하를 활용하자는 의견이었다.

현재 준공된 지하 주차장은 건축면적 2496㎡ 규모로, 최대 56대(확장형 46면·장애인 2면·임산부 2면·일반 2면·소형 4면)를 수용할 수 있다. 주차장 지상에는 나무, 각종 놀이시설 등 어린이놀이 터, 운동시설 등을 재설치해 주민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주차장은 오는 2월 중 민간 위탁자가 선정되는대로 곧바로 운영될 계획이다. 주차요금은 '북구 주차장 조례'에 따라 30분에 7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 다. /김용희기자 kimyh@

## 광주 보건소 간호사 2명중 1명은 비정규직

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17개 시·도 중 5위···전국 평균보다 9.3%P 높아

광주지역 보건소·보건지소 근무 간호사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5번째로 많은 비율이다.

"진짜사나이 되어 오렴"

2일 대한간호협회 산하 보건간호사회의 '2017 보건간호인력 통계'에 따르면 광주 공공보건기관에서 일하는 전체 간호사는 222명으로 이중 105명(47.3%)이 비정규직이다. 이는 전국 평균 38% 보다 9.3%포인 트 높은 수치로, 제주(62.0%), 부산(54.9%), 인천(53.96%), 서울(48.9%)에 이어다섯번째로 많다. 전남 공공보건기관 간

올해 첫 입영행사가 2일 광주시 북구 육군 제31보병사단 충장관에서 열렸다. 가족들이 입대 장병

호사 비정규직 비율은 26.4%(655명 중 173명)로, 경북과 함께 공동 12위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간호사(정규·비정규직 포함) 1인당 담당 인구수로 봤을 때 광주는 6670.3명으로, 대구(9447명), 대전(8604.4명), 부산 (7431.4명), 경기(7408.8명)에 이어 5번째

였다. 전국 평균은 5409명이었다. 공공보건기관 간호사는 주민의 건강증 진·보건교육·예방접종·결핵 관리·모자 보건·정신질환 관리·방문 건강관리·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 사업 등 각종 보건사업 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간호사회 관계자는 "전국 평균 40%에 육박하는 인력이 비정규직이어서 업무 연속성과 의료서비스 질적 관리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소 역할을 강화하려면 간호인력의 고용 안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

